

일본출판의 새 쟁점 '저작물 복사권'

사회주의국가 중국서도 저작권법 마련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일본에서는 기업내에서 책을 저작권자에게 대가 지불 없이 불법복사하는 데 대한 복사료를 징수하기 위한 단체가 4월 1일자로 발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서적·잡지 분야에서 저작권의 권리행사단체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더욱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적·잡지관련 저작권권리행사단체가 생겨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거의 방치상태였던 불법복사 사회관행에 제동을 걸고 획득된 저작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로 협조, 저작권권리행사단체 설립에 나선던 일본의 출판단체와 학자단체가 설립 직전에 분열, 같은 목적을 지닌 2개 단체가 탄생했다. 따라서 복사료징수의 주요대상인 기업 등은 2개 단체와 복사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출발한 셈이다.

4월 1일자로 출범한 일본의 저작권권리행사단체 2개중의 하나는 일본출판사들로 조직된 '出版者著作権協議會'(회장 小林武彦 光文社 사장)의 '일본복사권센터'며 다른 하나는 日本工學會 등 학자단체·學協會저작권협의회(회장 尾佐竹 日本공학회 회장)의 '學協會 저작권집중처리시스템'이다.

출판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해왔던 일본學協會는 3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자적인 저작권권리행사단체를 발족시키기로 정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출판자협의회도 4월 1일자로 같은 성격의 단체를 설립키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學協會와 출판자협의회는 지금까지 협조노선을 취해왔으나 學協會내부에서는 출판자협의회가 주도로 저작권권리행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데 반발도 적지 않았다. 내부 갈등 끝에 최종이사회에서 "기본노선이 다른 출판측의 조직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독자적인 단체를 발족시킨 것이다. 일본 學協會는 우리나라의 全經聯과 같은 단체인 일본 經團連 가맹기업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저작 복사이용료 징수시스템을 구축, 올 초가을부터 상장기업을 우선적으로 복사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출판자협의회에서는 이미 가맹출판사를 통해 작가 등 1만여명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복사료징수 위임장을 받아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출판자협의회는 '일본복사권센터'를 통해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

가 저작권료의 지불에 응하지 않는 술집에 대해서는 가라오케세트 철거를 법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복사이용료 징수에 대한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강력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서적 등을 저작권자에게 대가 지불 없이 무단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족된 복사료징수를 위한 2개 저작권권리행사단체는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복사료를 일원화하여 징수한 후 저작권자들에게 환원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노선을 같이해온 일본의 저작권관련 두단체가 결별을 선언하고 딴 살림을 차리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당초 일본 출판업계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새로이 출판자의 권리(版面權)을 획득, 불법복사에 대항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지난해 6월말 일본저작권심의회 제8 소위원회가 "자가 등과는 별도로 출판자에게도 특정권리를 인정, 무단으로 서적 등을 복사하는 사람에 대해 복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제안했던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왔던 것.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권리가 인정될 경우 많은 경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 그같은 목표를 저작권법 개정으로부터 '일본복사권센터'의 설립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일본출판자협의회는 같은 구상을 갖고 있던 일본공학회 등 다른 권리자단체를 포함, 공동권리 집중처리조직을 발족, 불법복사 방지상태를 해소하려는 생각을 해왔다. 그같은 움직임과 함께 자연과학계의 학자단체(일본 學協會)는 일본 經團連개발부의 조언을 받아 산업계로부터 자금을 모집, 독자적으로 권리행사기관 설립 준비작업을 해왔다. 지금까지 일본 學協會는 출판단체와 협조하여 통일센터를 설치운영할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學協會의 일본출판계 주도에 의한 조직운영에 대한 반발과 내부의견 상충이 표면화, 당초 예정했던 수평적인 '日本복사권센터'의 설립구상이 백지화되고 두 단체가 갈라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거액의 이용료를 지불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經團連 가맹기업의 지원을 받는 학자단체가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일본 출판자협의회는 일원화 구상이 무너짐에 따라 출판단체가 저작권권리행사센터를 설립하여도 일본 기업에 대한 복사료 지불요청 등을 들

러싸고 일본 복사권센터의 운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 복사권센터에서는 일본 經團連 및 각 공협회 등에 대해 저작권처리조직의 설립취지 설명에 나섬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대한 취지설명이 끝난 후에 '일본복사권센터' 상장기업 등 대형기업과의 개별계약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복사권센터가 구상하고 있는 복사허락 계약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복사하는 출판물마다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일정기간 및 조건을 결정하는 포괄 계약의 방식이다. 일본복사권센터는 두 계약 모두 1페이지당 2엔(韓貨 약 1천원)을 기본 복사료로 책정해놓고 있다. 이와함께 대학 도서관 등과도 복사료 계약교섭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9월 이후 실제적으로 복사료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복사권센터는 또 내년이후의 복사료 산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복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學協會에서 발족시킨 學協會저작권 집중처리시스템은 복사료징수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적이나 잡지분야에서 복사료를 징수하는 조직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모두 18개국에 이같은 조직이 발족되어 있는 상태이다.

비록 2개 단체로 나뉘어 발족되었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그동안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복사권에 대한 대가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일본사회에서는 저작권 특히 복사권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이며 일본의 이같은 시도는 우리나라 출판계에도 적지않은 것을 시사해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서도 6월부터 저작권법 실시

중국은 저작권분쟁을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해 '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을 제정, 올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桂林에서 개최된 제1회 中國全國版權會議에서 중국 신문출판사의 宋木文사장은 저작권법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저작권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저작권 정신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

호하고 나라 부문, 개인의 이익, 작자와 작품의 대중매체에 대한 이익, 작가와 대중 이익 등을 고려, 합리적인 협의저작권 관계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국판권회의에서 관련부문의 책임자와 관련대표자는 저작권법실시 조례와 계열부속법규도 제출, 토론을 벌였으며 집단관리기구와 중재기구의 설립, 협의저작권관계문제도 연구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또 저작권행정 관리부문의 개선과 강화를 위한 건의서도 제출, 저작권법상의 실시도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열린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광범위한 지식인의 창작의욕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위원회에서 蠶美厚위원은 오랫동안 중국에는 저작권에 관한 완비된 법률이 없어 과학문화작품의 창작에 종사하는 작가와 기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이 보호되지 못했으며 저작권 침해행위가 법률상 제재를 받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저작권법을 제정, 법률에 기초한 과학문화분야의 작품창작에 종사하는 작가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는 것이며 작가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통해 우수한 작품창작을 촉진하여 중국 과학문화 사업을 번영시키고 과학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작권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저작권법 제정 및 실시가 평등·상호이익에 기초한 대외문화 교류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마련한 저작권법 초안 중 작품분류에 있어 문학·예술작품이 많고 학술저작은 적다는 점과 직무와 관련된 작품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작가가 보수를 취득하는 권리규정을 첨가시켜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일본업계,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 새로 설립

일본의 서적·출판물유통회사·출판사 등 출판업계 전체를 총망라한 새로운 단체가 4월 1일 발족했다. 그동안 일본의 출판업계는 미국과 일본간의 시장구조협약에서 의제로 논의됐



일본 기업의 복사실. 복사료와 관련된 저작권리행사단체가 새로 발족됨으로써 앞으로는 이와같은 기업내 불법복사행위도 대가를 치르도록 돼 있다.

던 재판매가 가격 유지제도의 문제와 일본의 대규모소매점포법의 규제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다른 업계에 비해서 유통기구의 정비마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출판관련업계는 일본정부의 주도로 한데 힘을 합쳐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단체를 발족시킨 것이다.

이번에 일본 출판관련업체들이 모두 참가 새로이 발족시킨 단체의 명칭은 '재단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이며 이사장은 東京출판판매주식회사 遠藤健-사장이 취임했다. 일본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은 출판사들과 사단법인 일본 출판유통협회 및 일본 서점상조협연합회가 공동사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그동안 일본 출판업계는 재판제도에 기반으로 되어 있는 위탁제도와 전국에서 같은날 발매하는 등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특유의 유통관행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통관행 때문에 책을 주문해도 손에 넣기까지에는 1~2주간이나 걸리는 등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발족한 일본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새로운 판매방법의 조사연구 등 그동안 구태의연했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문자정보를 전자미디어에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사업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 활자문화와 영상문화의 조화도 도모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독서지도원의 육성과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돕기 위해 서점에 '평생교육상담코너'를 설치하는 등 對국민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업원 교육 및 판매기술지도 등 경영지와 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본출판관련업계는 출판사·서점·유통회사가 각기 권익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업계가 모두 참가한 단체를 발족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따라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출판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를 마련하고 나선 것은 역시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의 출판관련업계도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美「포브스」지 일본어판 발행

미국의 3대 비즈니스誌의 하나인 「포브스」(Forbes)誌가 내년 봄 일본어판을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포브스誌는 최근 일본 대형출판사인 교세이와 잡지분야에서 업무 제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섭대상인 교세이사는 잡지부문을 강화, 종합출판사로의 변신을 노려 92년 봄까지는 「포브스」誌 일본어판을 창간하겠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포브스誌도 일본에 진출할 경우 잡지판매는 물론 광고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誌는 일본어판을 발행, 부수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교세이사는 일본어판 「포브스」誌를 빠르면 92년 4월, 늦어도 기본계약으로부터 1년후에 창간, 매월 2회 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교세이사는 「포브스」誌 일본어판을 처음에는 5만부부터 시작, 10만부까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개별우송방식, 일반서점판매 등 다양한 판매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교세이사는 「포브스」誌 일본어판 발행을 위해 일부 편집스텝을 외부에서 스카우탈 예정이며 6월까지의 기본합의계약 체결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브스」誌는 「비즈니스위크」 「포천」과 함께 미국의 종합비즈니스誌로 영어판 발행부수는 약 74만부이며 「비즈니스위크」는 「포천」誌가 뉴스기사와 기업랭킹으로 유명한데 반해 심층적인 취재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시사경제주간지이다. 작년에 걸프전쟁과 미국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미국잡지계가 광고량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포브스」誌는 매출액이 착실한 성장을 기록, 명성을 날리고 있다. 「포브스」誌의 광고페이지 수는 미국전체에서 제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수입은 약 1억7천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기업으로부터의 광고출고량은 일본출판사와 제휴한 종합지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이때문에 지난해 초부터 경쟁지의 일본광고영업 간부를 스카우탈, 일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이다.

한편 「포브스」誌는 지난해 3월에는 독일어판을 10월에는 중국어판을 창간하는 등 국제화에 보급피치를 올리고 있으며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비즈니스誌를 갖고 있지 않은 파트너와 제휴 일본어판 창간에 서두르고 있던 중이었다.

교세이사는 연간 매출액 4백99억5천만엔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일본관공서에 납품하는 법규서에서 얻고 있다. 교세이사는

금년 가을 처음으로 서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잡지 「Estaminet」를 창간하는 것 이외에 미국 포브스誌와 제휴로 잡지부문 비율을 2~3년 이내에 10%까지 높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신인작가 발굴 전문의 伊 지티社

최근 이탈리아 출판계에는 신인작가를 발굴 그들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탄생, 주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출판사는 이탈리아 미라노시에 살고 있는 조반니 토리토씨가 설립한 지티社이다. 이 출판사는 기존 출판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아직 틀이 잡혀 있지 않은 작가를 발굴해내 그들의 작품을 출판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예를 들어 소설을 출판하길 원하는 희망자는 15만리라(약 9만원)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받아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면 10인으로 구성된 독자위원회가 심사를 해, 선정된 작품은 출판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4년간 그 작품을 쓴 작가는 익명으로 지내야 한다는 독특한 조건이 따라붙는다. 한마디로 작가의 경력 및 이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에 의해 그 작품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같은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원고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판매 즉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시장경제 원리에 철저히 적용시키고 있다. 그때문에 작품을 쓴 작가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낼 뿐이며 출판된 책을 사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등 엄격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만약 투자한 자금이 많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그 후 출판은 보류한다고 경고되어 있어 작가도 판매에는 크게 협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출판사는 이같은 시스템의 첫번째 시험작업으로 2권의 작품을 출판했다. 최근 나온 두 작품은 표지를 요란하지 않게 꾸몄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유명 인쇄소에서 인쇄, 오타자를 방지하는 등 크게 신경을 썼다. 그러나 작품내용은 두책 모두 충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하나인 「이어링」이라는 작품은 정육에 사로잡힌 여성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으며 「마음 가득히」라는 작품은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무대로 역시 작은 지역사회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며 특히 대담한 언어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